

---

저출산 정책 해외사례 연구  
독일 출장보고서

---

2024. 2. 4. - 2. 8.

**KDI** 공공투자관리센터

# I 국외출장 목적 및 개요

---

## 1. 출장 배경 및 목적

-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수탁 용역인 「저출산 정책 해외사례 연구」를 진행하고 있음.
  - 본 연구는 저출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해외 주요 사례 및 정책들을 살펴보며,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데 있음.
  - 이 중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여 '출산율 관리의 모범사례'로 평가되는 독일의 주요 기관 및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주요 가족정책 및 사회적 인식 등 핵심 요인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.

## 2. 출장 개요

- 출장 기간
  - 2024년 2월 4일(일)~2024년 2월 8일(목) (3박 5일, 출입국일 포함)
- 방문 기관
  - 독일 연방인구연구소(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: BiB)
  - 독일 연방 가족·노인·여성·청소년부(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, Senior Citizens, Women and Youth: BMFSFJ)
  - 독일 연방 보건부(Federal Ministry of Health: BMG)
- 출장자 및 출장 일정
  - 연구진: 한성민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실장, 한승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, 황서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

<표 1> 출장 일정

일 자	일 정	
2/4(일)	11:30 - 17:20	인천 → 프랑크푸르트
		KE0945(13시간 50분) (숙소) Dorint Pallas Wiesbaden
2/5(월)	10:00 - 12:00	독일 연방인구연구소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(BiB) 방문 및 담당자 면담
		면담자 : Martin Bujard 부소장, Samira Beringer 연구원, Giang Albert 고령화 및 인구학그룹 조교
	12:00 - 14:00	연구진 회의
	14:00 - 17:00	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(BiB) 방문 및 담당자 면담
		면담자 : Dr. Nadja Milewski 출산 부문 연구그룹 책임자, Carmen Friedrich 연구원, Giang Albert 고령화 및 인구학그룹 조교
17:00 - 22:25	프랑크푸르트 → 베를린	
		LH0202(1시간 10분) (숙소) Courtyard by Marriott Berlin City Center
2/6(화)	10:00 - 12:00	연구진 회의 및 통역사 사전 미팅
	14:00 - 17:00	독일 연방 가족·노인·여성·청소년부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, Senior Citizens, Women and Youth (BMFSFJ) 방문 및 담당자 면담
		면담자: Anne Domnick, 대외협력팀
17:00 - 19:00	연구진 회의 및 간담회의	
		(숙소) Courtyard by Marriott Berlin City Center
2/7(수)	09:30 - 12:00	독일 연방 보건부 Federal Ministry of Health (BMG) 방문 및 담당자 면담
		면담자 : Dr. Sabine Reiter, 양자 보건 정책팀 Dr. Marius Glaubitz, 분자, 생식, 생명 윤리 의학팀 Anne Liewald, 혜택 및 서비스 관련 법률팀 Dr. Luise Rexroth, 사회보험팀
	12:00 - 16:00	연구진 회의 및 공항 이동
	16:30 - 16:25(+1)	베를린 → 암스테르담 → 인천
		KE6430(1시간 25분) KE5926(11시간 50분)

## II 독일 기관 및 부처 방문 결과

### 1. 독일 연방인구연구소(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: BiB)

- (일시 및 장소) '24. 2. 5(월) 10:00~12:00, 14:00~17:00 BiB 회의실
- (참석자) Martin Bujard 부소장, Dr. Nadja Milewski 출산 부문 연구그룹 책임자, Samira Beringer 연구원, Carmen Friedrich 연구원, Giang Albert 고령화 및 인구학 그룹 조교
- (면담 내용) ① 독일 출산율 하락 및 반등의 주요 요인, ② 가족지원 정책의 흐름, ③ 주요 저출산 정책, ④ 한국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제언

#### 1) 기관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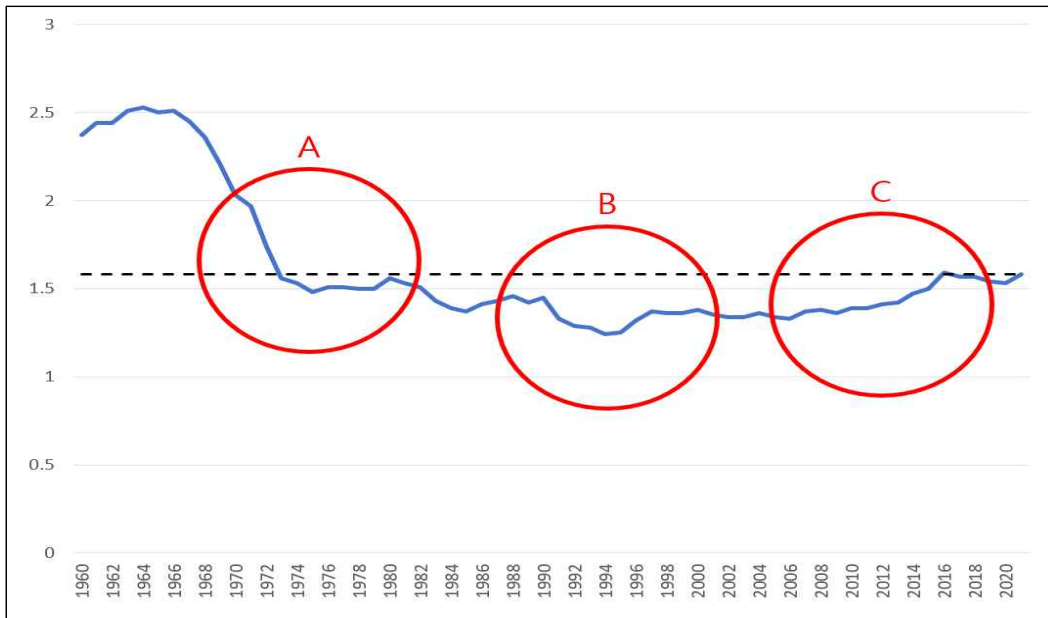
- 1973년 창설된 독일 연방 내무부(BMI) 산하 연구소로 저출산, 고령화, 인구학, 보건, 이민 등 독일 인구학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연구 진행
  - 연구 자료는 독일 정부 및 정부부처의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인구 통계 및 동향 분석에 대한 조언 제공

#### 2) 주요 논의

- ① 독일 출산율 하락 및 반등의 주요 요인
  - 독일은 1960년대 출산율 정점을 기록한 이후 약 40년간 합계출산율이 1.4명 수준을 기록하며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 내 저출산 국가로 분류됨.
    - 독일 합계출산율은 1964년 최고 2.53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1971년에는 2.0명 미만(1.97명) 수준에 도달
    - 이후 1994년에는 최저 수치인 1.24명까지 떨어진 후 2000년대 초반까지 1.3명 수준을 유지
    -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국가로 산업화 이후에도 '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주부'로 있는 전통적 가정 형태를 장기간 유지함.

- 2000년대 이후 독일 정부는 적극적인 가족정책 시행으로 출산율이 반등하는 계기를 마련
  - 2000년 1.38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.5명 수준을 기록
  - 이후 합계출산율은 1.5~1.6명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

[그림 1] 독일 합계출산율 추이(1960년~2021년)



주: 점선은 OECD 국가들의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평균(1.58명)을 의미함.  
 자료: OECD data (<https://data.oecd.org/>)

- 독일의 주요 출산율 변동 기간은 다음과 같음.
  - A 기간(하락 기간): 1970~1980년
  - B 기간(최저 기간): 1990~2000년
  - C 기간(반등 기간): 2006~2016년
- (A 기간) 독일은 196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출산율이 서독, 동독 모두 급격히 하락하였고,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.
  - 68혁명, 두 차례의 석유파동 등 외부적 충격과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, 피임약의 보급 및 합법화 등으로 독일 내 경제·사회·문화적 불

안정성이 증대하였고, 이러한 배경이 당시 출산율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

- 서독은 50년대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달성한 이후 전자, 자동차 산업 등에서 일본에게 시장을 빼앗기며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이 둔화됨.
-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며 국경이 폐쇄되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음.

- 동독의 경우 1970년대 초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 우선권을 주고, 한 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, 기존 임금의 50%를 지급하는 등 여러 지원책 등으로 1972년 정도를 기점으로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다시 하락

□ 동서독 간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한 통일 이후 독일의 출산율이 하락하는 데 영향

- 서독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: “남성생계부양자-여성전업주부모델” 기반으로 3세 미만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
- 동독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: “이인자소득모델” 기반 국가로 서독에 비해 영유아 보육시설 위탁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 근로 증가로 출산율이 하락

[그림 2] 1950년대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홍보물



[서독] “BCKIN과 함께 즐거운 베이킹”

[동독] “10분 뒤에 엄마가 올거야”

□ (B 기간) 199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최저점인 1.24명 수준까지 하락하여 양육에 있어 가부장적인 사회적 문화를 출산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

○ 당시 동독의 합계출산율은 0.77명으로, 통일 이후 동독의 합계출산율 하락이 독일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임.

– 동독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자연스러운 이인소득자모델 기반 국가로 1970년대부터 소득 일부분을 대체하는 육아휴직수당, 영유아 탁아소 운영 등의 가족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 2.3~1.5명 수준을 유지

○ 사회주의 체제였던 동독이 서독의 민주주의 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정책 기반이 남성생계부양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체제전환 쇼크(transition shock)를 경험하며 출산 지연 및 기피 현상 발생

–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인해 경제·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

○ 또한 당시 자녀 영아기에 여성이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했으나, 역설적으로 육아휴직이 장기화되면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여성의 사회복귀를 막는 결과를 낳게 됨.

□ (C 기간) 2000년대 들어 독일 정부는 가족 및 보육 정책을 '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'와 '가족친화적 사회적 환경 조성'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

○ 일·가정 양립, 가정 내 성평등 역할 실현, 아동빈곤율 감소, 여성고용률 제고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

## ② 가족지원 정책의 흐름

□ 저출산 대응을 위해 1) 일·가정 양립, 2) 성평등, 3) 아동친화적 사회로의 가족정책 방향성 전환이 출산율 반등에 기여

○ 2003년 '지속 가능한 가족정책(Nachhaltige Familienpolitik)' 패러다임 전환

○ 2006년 「육아휴직법」(Bundeskindergeldgesetz, BKGG) 개정 및 「연방

- 부모수당 및 부모휴직법」(Elterngeld) 제정을 통하여 성평등, 여성 경제참가율 증진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
-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충아동수당 (Kinderzuschlag) 도입
  - 주요 타겟층은 고학력 여성으로 해당 코호트의 출산 후 직무 복귀가 출산율뿐만 아닌 노동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
  - 이에 소득 대체 휴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여성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수당 수급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여 여성의 일자리 복귀를 유도
  - 부모수당플러스 제도를 도입하여 수당 수급 기간 중 시간제 근로를 허용하여 여성의 일·가정 양립 및 경력 단절 문제 완화(육아휴직 기간동안 파트타임 근로를 하면 급여를 반으로 줄이는 대신 휴직기간을 2배로 확장)
- 2013년 「아동보호법」(Kinderförderungsgesetz) 개정을 통해 가정양육 부담 완화
-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나이 제한을 기존 만 3세에서 만 1세 이상으로 확대
  - 2006년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률은 5.9%에 불과하였으나, 육아 개혁 및 아동 보육시설 증진 이후 2020년 17%까지 증가(BMFSFJ, 2021).
  - 이후에도 2013년 「좋은 보육시설법」(Gute-Kita-Gesetz) 및 2020년 아동 보육시설 투자계획(Investitionsprogramm Kinderbetreuung) 등을 추진하며 아동 보육시설 확충, 품질 향상,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
- 2015년 가정정육수당(Betreuungsgeld) 폐지 및 부모수당플러스(ElterngeldPlus), 파트너십보너스(Partnerschaftsbonus) 도입
- (부모수당플러스) 수당 수급 중 시간제 근로를 허용하여 여성의 일·가정 양립 및 경력 단절 문제 완화
  - (파트너십보너스)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자 수당 수급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최소 2개월의 육아휴직을

## 시청하도록 하는 아빠의 달(Vätermonate) 도입

- 2000년대 후반 독일 출산율 반등에 가장 성공적으로 기여한 가족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(Elternzeit) 및 부모수당(기본부모수당, 부모수당플러스, 파트너십보너스)으로 평가
  - 단순 현금성 지원은 상대적으로 임금 대체 효과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

### ③ 주요 저출산 정책

#### □ 육아 휴직(Elternzeit)

- (시행 연도) 1985년 ~ 현재
- (정책 목표) 일·가정 양립 및 양육 환경 지원
- (정책 대상)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
- (정책 수단) 제도적 지원
- (주요 내용) 총 3년의 기간 동안 일괄 사용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파트너가 동시에 혹은 각각 신청 가능
  - 여건에 맞는 부모수당제도를 신청하여 지원기간 동안 소득 대체
  -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의무적 6주의 출산휴가 기간이 3년에 포함되며 남성의 경우 출산 이후 시점부터 활용 가능

#### □ 부모수당제도(Elterngeld): 기본부모수당(Basiselterngeld)

- (정책 목표) 근로소득 대체 및 공동육아
- (정책 대상)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정 중 가구 소득<sup>1)</sup>이 300,000유로(4억 3천 6백만원) 이하인 가정
- (정책 수단) 현금성 지원
- (주요 내용) 최대 14개월 동안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며, 부부가 각자 12개월의 휴직만 신청 가능하여 파트너(주로 남성)가 무조건 최소

1) 개인 상한액 250,000유로(3억6천3백만원) 이하

2개월의 휴직을 신청해야 함.

- 메르켈 총리 재임기간 동안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기 내용이 재조정 된 이후 Vätermonate(아빠의 달)이라는 용어가 생김.
- 기준 급여액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증가하나, 순소득 상한선 이상은 소득대체율 65% 일괄 적용
  - 근로자의 경우 산전 12개월 간 평균소득과 산후 소득의 차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2,770유로(400만원)를 상한액으로 그 이상의 소득은 상한액 기준으로 산정
  - 2022년 기준 약 187만 명이 이상이 부모수당을 지원받음(독일연방 통계청, 2024).

#### □ 부모수당제도(Elterngeld): 부모수당플러스(ElterngeldPlus)

- (시행 연도) 2015년~현재
- (정책 목표) 일·가정 양립/근로소득 대체/공동육아
- (정책 대상) 부부가 모두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경우(주당 최대 32시간)
- (정책 수단) 현금성 지원
- (주요 내용) 최소 150유로(21만원)~900유로(130만원) 지원(기본부모수당의 50%)

#### □ 부모수당제도(Elterngeld): 파트너십보너스(Partnerschaftsbonus)

- (시행 연도) 2015년~현재
- (정책 목표) 일·가정 양립/근로소득 대체/공동육아
- (정책 대상) 부부가 모두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경우(주당 24~32시간)
  - 미혼모/부는 조건에 따라 모든 제도의 최대 기간 지원
- (정책 수단) 현금성 지원
- (주요 내용) 부모수당플러스 최대 사용 기간에서 추가 4개월간 최소 150유로(21만원)~900유로(130만원) 지원(기본부모수당의 50%)

<표 1> 기본부모수당과 부모수당플러스 비교

세부 항목	기본부모수당	부모수당플러스
기간	12개월	14개월
최소 사용 기간(부모당)	2개월	4개월
최대 사용 기간(부모당)	12개월	24개월
소득대체율	66%	33%
최소지원금액/월	€300 (43만원)	€150 (21만원)
최대지원금액/월	€1800 (261만원)	€900 (130만원)

자료: BMFSFJ, 2023

④ 한국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제언

- 저출산 문제는 단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접근보다는 노동시장(Labour market) 환경개선, 성평등(Gender equality), 아동정책(Childcare Policy)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.
  -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노동환경 및 노동시장 내 인식 전환 필요
  - ‘파트너십플러스’와 같은 성평등 정책 추진
  - 무상 교육 대상 연령 확대
  - 도시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다양한 근무 형태(재택근무)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거주환경 지원

## 2. 독일 연방 가족·노인·여성·청소년부(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, Senior Citizens, Women and Youth: BMFSFJ)

- (일시 및 장소) '24. 2. 6(화) 14:00~17:00, BMFSFJ 회의실
- (참석자) Anne Domnick, 대외협력팀
- (면담 내용) ① 독일 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BMFSFJ의 핵심 가족정책, ② 주요 가족정책 개정 이후 변화, ③ 지역 간 출산율 격차 현상

### 1) 부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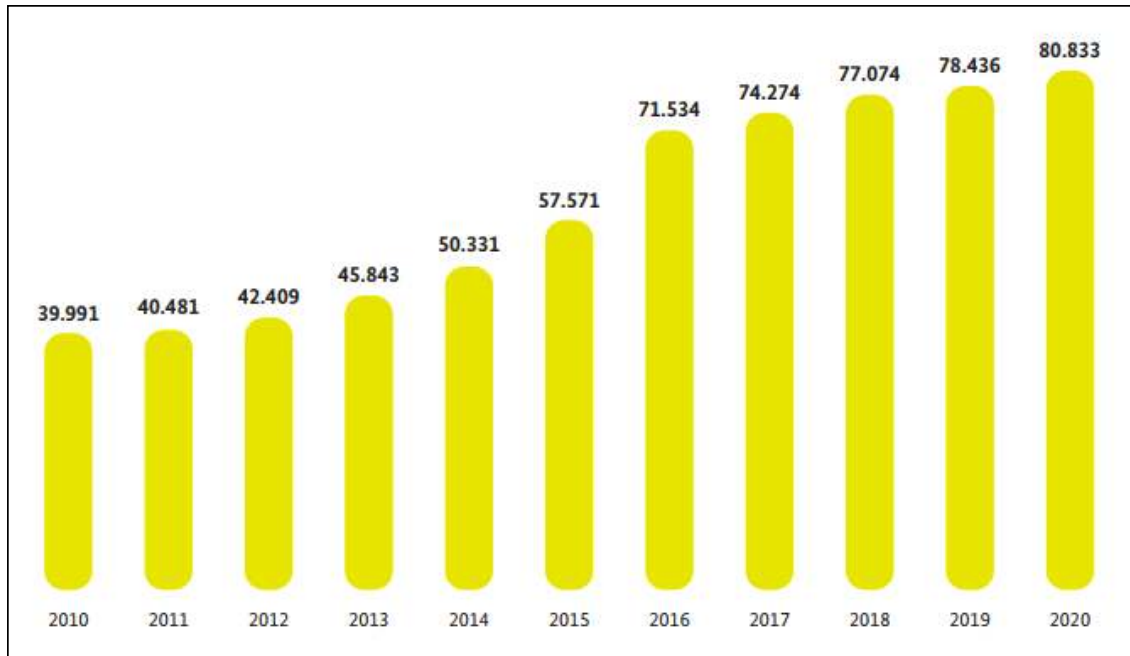
- 리사 파우스(Lisa Paus)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이 소년·가족·복지·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연방정부의 성평등 정책 집행에 독립적 관할권을 갖는 성평등 정책의 핵심 부처임.
- 독일 출산율 반등의 핵심 가족정책인 육아휴직제도(Elterngeld)와 각종 아동수당 및 세제지원 등 가족정책 관할 부서

### 2) 주요 논의

- ① 독일 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BMFSFJ의 핵심 가족정책
- BMFSFJ의 가족정책 보고서(2006)에 따르면, 독일은 무자녀 가정의 증가보다 이를 보완하는 다자녀 가정의 감소가 저출산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
- 이에 다자녀 양육 비용 완화를 위한 현금성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비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함.
  - 추가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 기준 자녀당 250유로(36만원)로 동결하고, 기본부모수당(최대 월 1800유로; 261만원)의 10%를 더한 형제보너스수당(최대 한도 월 1,980유로; 287만원)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혜택 제공

- 통일 이후,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① 일·가정 양립, ② 성평등, ③ 아동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가족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
  - (일·가정 양립 제도) 무급육아휴직 기간 중 부모수당을 시간제 근로 중에도 수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출산 후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소득 감소 문제 완화
  - (성평등 정책) 소득대체율이 높은 부모수당 수급 가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모수당을 최대기간(14개월)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의 아빠의 달(Vätermonate)을 활용하도록 유도
  - [그림 3]과 같이 2007년 부모수당 정책 개편 이후 2달 이상 육아휴직 기간 중 부모수당을 수급한 남성의 수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

[그림 3] 2개월 이상 부모수당을 수급한 남성의 수(2010~2020)



자료: BMFSFJ, 'Väterreport 2023'

- (보육 부담 완화) 3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조기교육으로 치환하는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
  - 사교육을 통한 조기교육보다 공교육시설 확충, 교육의 질 향상, 교사 수 증진 등의 국가 정책 및 사회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

## 고 인식

- 한편 부모수당 수급 과정에서 가정 내 여성의 양육 책임을 유도하는 고질적 문제도 발생
  - 실제 출산 전 월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남성의 89%, 여성 55%가 1,500유로(218만원)로, 소득이 보다 낮은 여성이 소득 창출을 포기하고 양육에 전담하며 부모수당(1,800유로)을 받는 것이 가계의 총소득 관점에서 더욱 큰 이득으로 환산됨.
  - 이에 대체로 남성보다 소득이 낮은 여성이 양육을 전담하게 되는 현상 발생
- 독일 출산을 반등에 기여한 핵심 정책은 육아휴직제도(Elternzeit)와 부모수당제도(Elterngeld)인 것으로 파악됨.
  - 여성의 가정양육을 유도하는 가정양육수당(Betreuungsgeld)은 독일의 가족정책 기조에 반하는 실패한 가족정책으로 평가

## ② 주요 가족정책 개정 이후 변화

- 기대아동수와 합계출산율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
  - 독일 연방인구연구소에서 진행된 18세~29세 여성 대상 기대아동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, 기대아동수는 1.9명이나 실제 합계출산율은 1.4명으로 집계되어 두 지표 간 간극 존재
    - \* 무자녀 여성 및 남성에 대한 기대아동수 분석 결과 약 30%가 3~4명으로 응답
    - 현재 독일 내 다자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
  - 기대아동수와 합계출산율 간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적 양육 환경 조성 필요성 강조
    -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수 증진, 영유아 보육시설 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, 누구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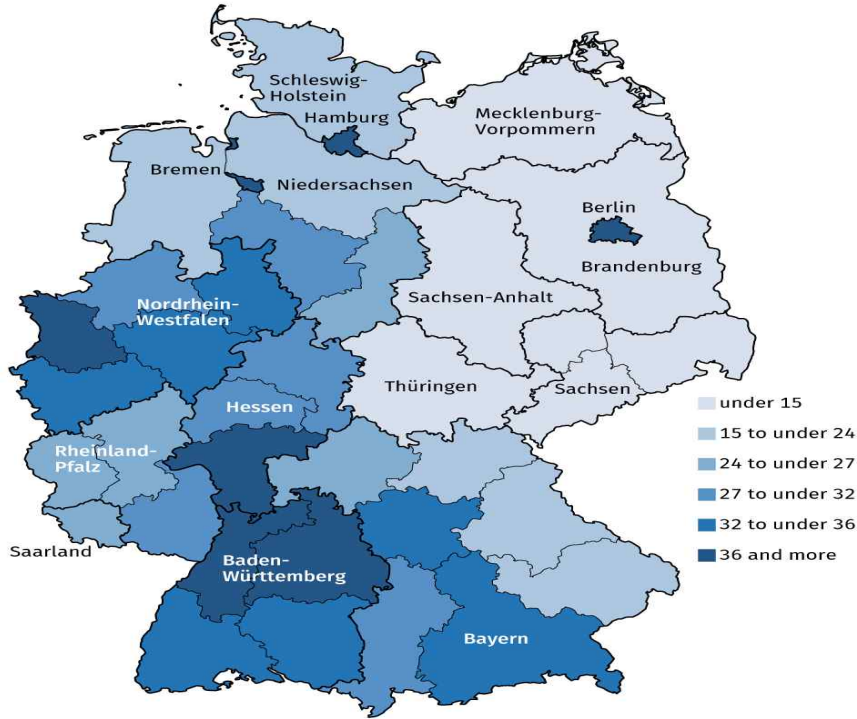
- 독일인이 생각하는 자녀의 가치(the value of children)의 긍정적 변화가 출산율 반등에 기여
  - 자녀가 미래의 부양자라는 인식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개인의 성장 및 행복을 위한 행위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으로 기여
- 독일의 경우 특정 학과(의료, 예술 등)를 제외하고, 대학 교육은 무상으로 운영되어 부모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비용적 부담이 적음.
  - 직업교육(Ausbildung) 후 취업 연계가 원활한 점도 교육 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
- 난민 친화적 정책 기조는 출산율 제고가 아닌 독일 노동시장 내 고학력 여성의 유입이 가능하게 함.
  - 난민 유입이 출산율과 양(+)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래 출산율이 높은(터키, 시리아, 아프가니스탄 등) 국가 출신 여성 난민의 경우에 한함.
    - \* 독일 내 시리아계 신생아 수: 2014년 2,300명 → 2017년 20,100명
    - \* 이라크와 아프간계 신생아 수 : 매년 5,000명씩 증가

### ③ 지역 간 출산율 격차 현상

-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여성 난민이 특정 지역에 집중분포 된 경우 해당 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.
  - 이민자 비율이 높은 주(바덴 뷔르템베르크, 바이에른,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)의 출생아 수가 다른 주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임.
- 가업을 이으며 외곽지역 내 거주자 자유로운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내 성비의 비대칭이 특정 주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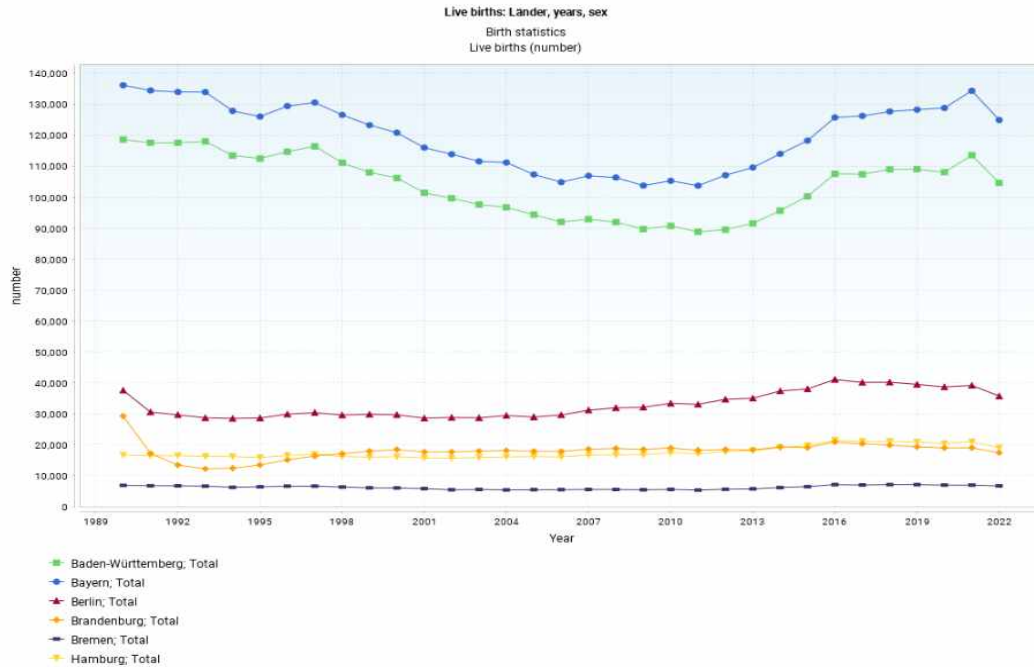
[그림 4] 주별 이민자 배경 인구 비율(2022)

Proportion of persons with a migrant background, 2022  
First results of the microcensus in (former) administrative regions, percen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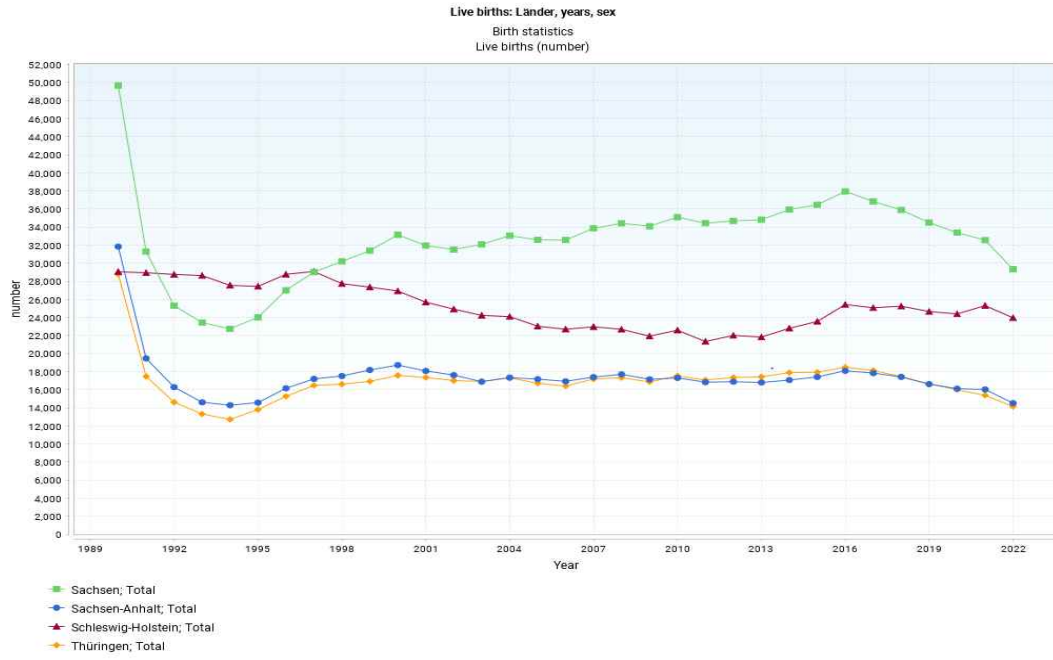
© Statistisches Bundesamt (Destatis), 2023

[그림 5] 지역별 출생아 수



주: 바덴 뷔르템베르크(초록), 바이에른(파랑), 베를린(분홍), 브란덴부르크(주황), 브레멘(보라), 함부르크(노랑)  
자료: BMFSFJ, 2024

[그림 6] 주별 출생아 수



주: 작센(초록), 작센 안할트(파랑), 쉘레스비히홀슈타인(빨강), 튀링겐(노랑)  
 자료: BMFSFJ, 2024

### 3. 독일 연방 보건부(Federal Ministry of Health: BMG)

- (일시 및 장소) '24. 2. 7(수) 9:30~12:00, BMG 회의실
- (참석자) Dr. Sabine Reiter, 양자 보건 정책팀, Dr. Marius Glaubitz, 분자·생식·생명윤리 의학팀, Anne Liewald, 혜택 및 서비스 관련 법률팀, Dr. Luise Rexroth, 사회보험팀
- (면담 내용) ① 독일 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연방 보건부의 핵심 정책, ② 장기요양 사회보험제도 소개, ③ 출산/양육 문화 및 관련 지원

#### 1) 부처 개요

- 독일 의료 시스템 및 질병 예방·관리 등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보건 분야 주요 이슈 및 최신 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자료·데이터 구축에 기여
  - 독일 보건의료 시스템 디지털화를 통한 양질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eGK(전자 건강보험 카드), ePA(전자 환자 기록) 및 전자 의료 카드, 전자처방전(e-prescription), 디지털 장기 요양 전자신청서(DiGA) 등 프로젝트 추진
  - 1883년 도입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제도 관련 각종 법률의 제·개정 및 관리를 담당하며 단일 보험료율(2023 기준 14.6%) 결정권을 가짐.

#### 2) 주요 토의 내용

- ① 독일 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연방 보건부의 핵심 정책
  - 출산율 상승에 기여한 가장 효과적인 보건 정책은 공보험(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; GKV)을 통한 임신·출산 관련 무상 의료서비스로 진료비와 더불어 마사지, 물리치료 등 포괄적으로 지원함.
  - 연간근로소득이 특정 기준 (Versicherungspflichtgrenze) 이상이거나, 자영업 혹은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민감 보험 (private Krankenversicherung; PKV) 활용

- 독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장법(Sozialgesetzbuch, SGB)에 근거하여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, 그리고 사회부조로 구성
- 2007년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 건강보험 혹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및 건강기금을 신설하여 운영
  - 재원은 건강기금의 할당금(보험료와 정부의 재정 지원)과 질병 기금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추가보험료로 구성
  - 2009년부터 의료보험 경쟁력강화법(GKV-WSG)에 따라 의료보험 민간 의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.
  - 연간근로소득이 특정 기준 (Versicherungspflichtgrenze) 이상이거나, 고소득자, 자영업자, 공무원 등은 공보험과 민간 보험 (private Krankenversicherung; PKV) 선택하여 가입
    - \* 가구 내 근로소득자가 공보험 가입 시 배우자 및 자녀를 가족가입자로 인정
    - \*\* 공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고용주가 50%씩 비용을 부담

<표 2> 독일 의료보험 가입자 구성

의료보험 가입자 구성	가입 조건
의무가입자	월 소득 5,775유로 미만 근로자 및 연금 수급자
가족가입자	의무가입자의 배우자 및 자녀(무소득)
자발적 가입자	월 소득 5,775유로 이상 자영업자 및 공무원

## ② 장기요양 사회보험제도 소개

- 독일은 유럽 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시작된 국가로, 1995년 최초의 장기요양 사회보험제도 도입
  - \* 2050년 고령인구는 약 2,51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
  - 공보험 가입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공적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며 민간보험 가입자의 경우 민간 장기요약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.
    - 유자녀 가정에는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료율을 할인 적용하는 혜택을 주고 무자녀 가구의 경우 0.25%p 상향 부과

- 자녀 수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의 배경에는 저출산 대응 측면보다 고령사회 대응 관점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부양을 통해 의료·돌봄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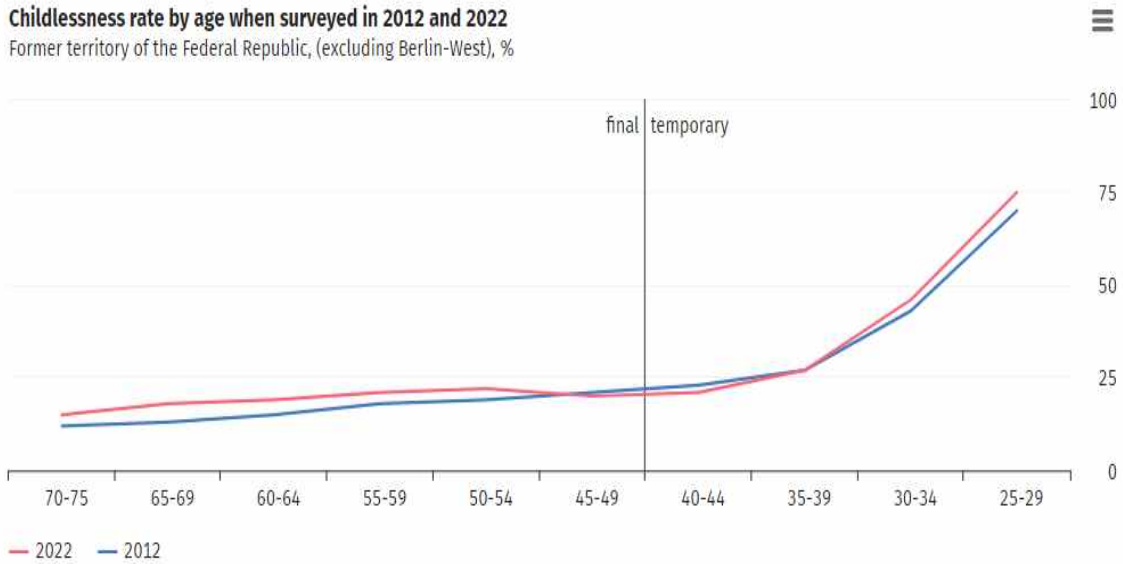
<표 3> 자녀 수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

자녀 수	0명	1명	2명	3명	4명	5명 이상
총 보험료율	4.00%	3.40%	3.15%	2.90%	2.65%	2.4%
고용주 부담 보험료율	1.7%					
본인 부담 보험료율	2.3%	1.7%	1.45%	1.2%	0.95%	0.7%

### ③ 출산/양육 문화 및 관련 지원

- 독일에서는 결혼을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용인됨.
  - 아동수당제도 도입 배경에는 대학생 여성들의 양육 부담 완화가 존재했으며, 독일 정부는 누구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강조
    - 가족정책 지원 기준을 혼인, 근로 여건, 가족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실질적 양육 여부나 소득 기준으로 설정
- 40대 이상 여성 출산율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며 오히려 40세~44세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2018년부터 21%를 유지하고 있음.
  - 인공수정은 여성의 경우 25세~40세까지, 남성의 경우 50세 이하가 지원 대상으로 해당 범위 외 연령층은 인공수정 성공률이 높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독일은 산후조리가 흔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산파를 고용하여 출산 도움을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공보험에서 전액 지원

[그림 7] 여성 연령별 무자녀 비율(2012-2022)



자료: 독일 연방통계청, 2024

- 2013년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독일 여성보다 난민 출신의 여성 및 아동 보호에 주로 활용되고 있음.
- '21년 대비 하락한 '22년 독일의 합계출산율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성은 삶의 질 증진을 통한 청년층의 출산율 제고
  - 기존 독일의 출산율 반등 현상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된 결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출산율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 평가

### III 사진자료

